Vol. 29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1. 7. 26.

▮ 정책동향

-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 정책방향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교육 지원
- 농식품부 장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 참석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사항 개정 고시 추진
-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식품 공급 사슬의 수자원 사용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1)
- **언론 동향** ❙ 한국판 뉴딜 속 농업·농촌 탄소감축 관련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 개헌 관련 현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 정책방향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부처 합동(2021.7.22.)

❑ 개요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 정책방향 발표, 2021.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021년 7월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

❑ 디지털 뉴딜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 [재정투자]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1조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

※ 2020년 3차 추경(2.4조 원) + 2021년 예산(7.7조 원)

○ [정책추진]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이행안',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 [법제도 마련]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

※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지침'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이행안' 등 디지털 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없이 이행

○ [규제개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73건의 규제 특례(2020.7.~2021.7. 기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20.10.)하여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지능형 도시)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

○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기금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기금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술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2021.5.)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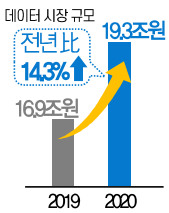
정책동향

※ 42개 정책형 뉴딜기금, 3조 701억 원 조성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1,050억 원 규모 투자 결정

▌디지털 뉴딜 분야별 1주년 성과▐

데이터 댐



- AI 학습용데이터 170종, 4.8억건
- 빅데이터 플랫폼(16개) 4,036종
- 공공데이터 10.5만개 개방

민관합동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가동
  - 4차례 회의, 12건 안건 논의

지능형 정부·국민체감 서비스



- '국민비서' 구비
  알림서비스 8종
  상담서비스 11종
  코로나19 백신 예약정보 등 (1,862만명 이용)
-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개관
  국보, 보물급 고문헌 VR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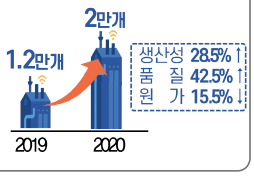
5G·AI 융합 확산

인천공항, 스마트산단 등 5G MEC 융합서비스(7개)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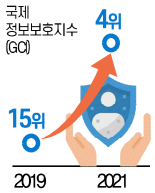
- 5G·AI 융합 프로젝트

의료·국방·지역산단 등 비공개 데이터 3.9억건 활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고도화

- 스마트 공장 2만개(~'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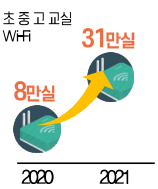


K-사이버 방역



- 중소기업 보안컨설팅
  보안취약점 점검 등 6천여건
- 사이버 침해사고 탐지 140만건
  악성코드 백신 보급 8.4만건
- 내PC 돌보미 5.7만명

디지털 교육 인프라



- 초·중·고 교실 WiFi 31만실
  학생용 태블릿 PC 15만대 (~9월)
-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

스마트 직업훈련
- STEP 온라인 강의실 258개 지원
  콘텐츠 1,925개 탑재

핵심 인프라 디지털 전환

똑똑한 국토 인프라 구축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188Km, 일반국도 30%)
- 3차원 지형지도(36,170Km²)
  지하공간 통합지도(52개市)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807개소) 실시간 수문 관리
- 스마트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 스마트 댐(23개)

스마트 의료

- 닥터앤서 1.0 (8개 질환)

대장암, 소아희귀질환
진단정확도 향상 (74%→92%)
진단 시간 단축 (5년→15분)

사우디 수출 추진 중

- 스마트 병원 보급

감염병 대응 관련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 3개 모델

- 스마트 돌봄

전국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 3.6만명
어르신 건강관리 1.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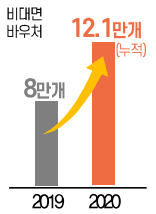
도시·산단·물류 디지털 혁신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108개 지자체)
- 스마트 그린 산단(7개 지정)
  - 통합관제센터, 물류공유플랫폼 표준제조혁신 등 스마트화

지자체 CCTV와 112, 119 연결 등 지능형 관제

-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2개소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 추진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 비대면 바우처 12.1만개 지원
- 스마트 상점 4,025개
  스마트 공방 82개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7.1만개

디지털 포용



전국 1,000개소
- 디지털 배움터 48만명 교육
-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5.8만세대, ~'21.6)

버스정류장, 공원 등
- 공공 Wifi 1만개 구축
  (1.8만개('19)→2.8만개('20))

정책동향

❑ 디지털 뉴딜 2.0 추진전략

○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국가·사회 전반이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추진 방향

1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2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3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뉴딜 1.0 →	뉴딜 2.0
D.N.A 생태계 강화	< D.N.A 기반 조성을 넘어, 全산업·국토에의 D.N.A 활용 가속화 >	
	·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 AI 학습용 데이터(4.8억건) 구축 등	·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 데이터댐 활용·가명정보 결합 강화
	· 5G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 5G 국가망 구축, 5G MEC 선도사업 등	· 5G 특화망 등을 통해 산업 융합 강화 * 5G 융합서비스특화망 활용 강화
	· AI 활용 기반 구축 *AI+X 7대융합프로젝트, AI윤리기준마련등	· AI 활용을 산업지역 전반으로 확산 * 지역주력산업-AI 연계대형선도사업추진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 WiFi 구축, K-에듀 통합플랫폼 등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 초중고 WiFi 조기 구축(22년→'21년) 비대면 AI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등
	· 스마트 의료 기반 조성 * 스마트 병원, 닥터앤서 1.0 (8개질환) 등	· 스마트 의료 성과 확산 * 스마트병원, 닥터앤서의 전지역 글로벌 확산
	·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 스마트 상점(~10만개 '25), 스마트 공방등	· 중소·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AIIoT 기반 스마트 상점 질적 고도화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민간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VR·AR 산업 육성 * XR 7대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 클라우드 산업 육성 *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	· 민간 주도 클라우드 산업 성장 지원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면 전환 시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 블록체인 등 시범·실증사업	· 블록체인 등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 주요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 자율차, 비대면 기술 등	·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 개발 * PIM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등
SOC 디지털화	< 디지털 SOC의 사회·산업 활용성 강화 >	
	· 국토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 * 3D 정밀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 사회산업 전 영역의 디지털트윈 확산 * 분야별 디지털트윈 간 연계(연합핵심기술)
	· 취약계층 등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디지털 배움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등	· 지역주민 일상의 디지털 활용성 강화 * 스마트빌리지 경로당 등 생활SOC 디지털화

정책동향

전략 1.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

○ **'데이터댐', '5G 고속도로'** 등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를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활용"**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

◈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가명정보 결합 등)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전략 2.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지역·전 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5세대(5G)·인공지능** 등 주요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가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복제물** 등 **주요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촉진

◈ AI+X 7대 융합프로젝트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 추진
◈ 국토 디지털 복제물 기반구축 → 사회·산업 전 영역에의 디지털 복제물 확산·적용

전략 3.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초연결·초실감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

◈ 닥터앤서 1.0(8개 질환) 개발 →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진출 지원(닥터앤서 2.0 등)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융합과제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조성
◈ PIM 반도체 등 미래 핵심기술 본격화,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디지털 뉴딜 2.0 분야별 추진 방향

○ ❶ **[데이터]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

※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정책동향

○ ❷ [네트워크] 산업 전 영역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세대(5G) 특화망**을 **조기 적용**하고, **5세대(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도 **지원**,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

-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2021년 하반기 중 발표할 (가칭) **'5세대(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

○ ❸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

-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계획'** 을 **확정·발표**할 계획

○ ❹ [지능형 의료] **'지능형 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 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사례**를 지역 주요 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

- 정밀의료소프트웨어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21년 중 '(가칭)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 을 **마련·발표**할 예정

○ ❺ [확장가상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을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

-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연합체'** 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

○ ❻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025)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

-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

정책동향

○ ❼ [디지털 복제물]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복제물 활용**을 **확대**,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제물**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

- 아울러, 2021년 하반기 중 디지털 복제물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복제물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

○ ❽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

○ ❾ [핵심기술 개발]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세대(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2022~)

◈ 총괄정책 동향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관계부처 합동(2021.7.22.)

❑ 개요

○ [관계부처 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2021.7.22.] 정부는 2021년 7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

※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社에서 153천 명 근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추진전략▐

비전	지역 산업과 문화의 공간, 新 활력 농공단지	
목표	활력회복 · 지역특성화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추진 전략	1 (인프라) 지역별 · 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 추진 2 (입주기업)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3 (시스템)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 (추진 배경)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

※ (2020) 생산 57조 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 달러(6.0%), 고용 153,253명(7.0%)

❑ 현황 및 실태조사

○ [현황] 2020년 기준 농공단지는 474개※이며 7,679개社에서 153천 명 근무

※ 산단(총 1,238개):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85개), 도시첨단산단(32개), 농공단지(474개)

- (업종 · 규모) 업종은 식음료 이외 기계 · 전기전자 등 복합적으로 분포※하며, 규모는 입주기업 15개 미만 단지가 전체의 59%(279개)로 소규모

※ 음식료 1,293개社(17%), 기계 1,424개社(19%), 전기전자 951개社(12%), 석유화학 875개社(11%) 등

정책동향

○ [실태조사] 3개월(2021.1~3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2,854개社 응답)

- (인력) 40~50대 중장년층, 남성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8.9%가 외국인
- (정책수혜) 응답 기업의 24%만 정책수혜 경험, 75%는 R&D 참여 희망
- (요청사항) 농공단지 환경개선, 인력확보, 자금지원, 부처 사업 연계 등

○ [시사점]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부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참여기회 확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

추진전략

전략 1.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 [유형화] 농공단지를 '산단경쟁력'과 '지역환경인프라'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제공

4개 유형	추진방향	지원방안
❶ 산업거점형 (경쟁력·인프라↑)	⇨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❷ 지역거점형 (경쟁력↑)		
❸ 성장촉진형 (인프라↑)	⇨ 활력회복·지역특성화	⇦ 산단환경개선 + 활력회복, 지역특화와 연계
❹ 기반구축형 (경쟁력·인프라↓)		

○ [맞춤형 프로그램] ①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 '구조고도화사업'을 농공단지까지 확대, ② 5대 핵심사업을 선정, ③ 농공단지에 맞게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5대 핵심사업	기존	농공단지 맞춤형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 복합문화센터 건립	■ 문화·체육공간 건립	■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 혁신지원센터 건립	■ 기업 지원기관 유치	■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제조 공간으로 활용	■ 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 아름다운 거리 조성	■ 특화디자인 도입, 녹지조성	■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정책동향

○ [패키지 지원] 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을 **선정**한 후, 5대 핵심사업을 개별 공모 없이 **'일괄 지원※'** 하여 **시그니처 단지 조성**(농공단지형 산단대개조)

※ 선정절차: (지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일괄 지원

- 일괄 지원 이외에도 관계 부처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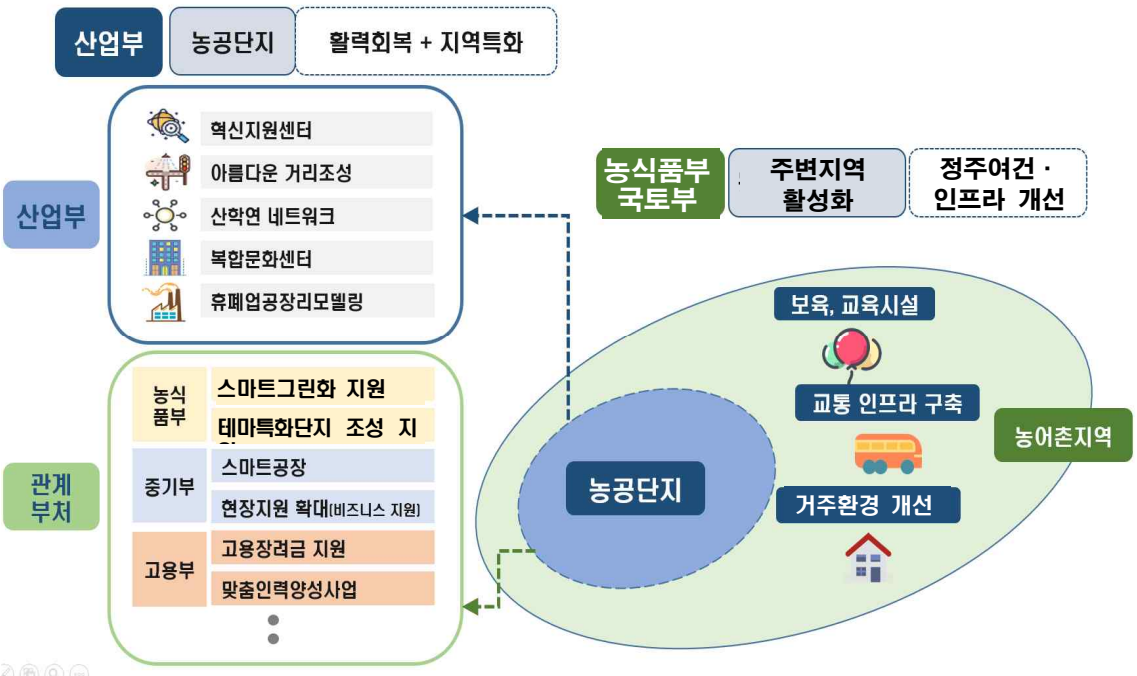
> ◈ 매년 20여 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년 4개씩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여 개의 시그니처 단지 조성 추진

○ [주변지역 활성화 연계]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거플랫폼 사업※※(국토교통부)을 통해 **'농공단지 주변 생활권'** 을 **활성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농식품부는 지역 선정 시 상호 우대)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통인프라 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 투자

※※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전략 2.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정책동향

○ [R&D 등 우대강화] ① 현장R&D와 현장컨설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②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산업통상자원부), ③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④ 수산가공·수출업체 융자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해양수산부) 등 입주기업 지원 강화

※ 금융, 법률, 회계 등 12개 분야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운영

※※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선정 가점 부여

○ [인력·직업훈련 제공] 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활용※ 촉진(고용노동부), ②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③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 원) 등

※※ 전국 공장정보 플랫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만을 위한 채용정보란 별도 신설·정보제공

전략 3.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 [제도 개선] ①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대폭 확대※, ② 유망 단지에 대한 면적 상한요건 완화※※, ③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 ④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제정) 신설 등으로 성장 환경 조성

※ '스마트팜' 등 융합 업종 입주 허용 + 산업시설구역의 50%(기존 30%)까지 모든 업종 입주 허용

※※ 입주계약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상한면적 제한 사유에서 면제

※※※ 법적명칭 변경(예: 농공단지 → 지역혁신산단)은 관계부처·지자체·입주기업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지원체계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9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산단공·농공단지연합회 간 소통 채널 구축※, ③ 산단공 내 지원 전담팀 설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 수립(정부)·애로사항(기업)을 실시간 공유

참고: 산업단지 비교(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산단 유형별로 지정 및 관리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지정과 관리를 모두 담당

정책동향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2021.1분기)▐

구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목적	국가기간산업 과학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및 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육성**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관리권자	산업부 장관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지정지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도시계획구역 內	**농어촌지역**
지정현황	47개	686개	33개	**474개**
평균면적	17,209천㎡	790천㎡	257천㎡	**162천㎡**
생산	134조 원	100조 원	0.56조 원	**14.6조 원**
수출	462억 달러	491억 달러	1.03억 달러	**28억 달러**
입주업체	56,392개社	43,130개社	1,273개社	**7,745개社**
고용	108만 명	100만 명	1.7만 명	**15.4만 명**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2020.12월 말, 개, 천㎡, %, 개사, 억 원, 백만 달러, 명)▐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률	입주기업체 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국가	47	808,814	96.4	55,764	4,913,584	157,054	1,066,120
	(3.8%)	(56.5%)		(52.2%)	(51.9%)	(47.2%)	(48.4%)
일반	685	537,209	92.7	42,156	3,972,787	163,733	967,555
	(55.3%)	(37.5%)		(39.5%)	(41.9%)	(49.2%)	(43.9%)
도시첨단	32	8,406	73.1	1,230	23,038	488	16,426
	(2.6%)	(0.6%)		(1.1%)	(0.2%)	(0.2%)	(0.7%)
농공	**474**	**76,956**	**95.6**	**7,679**	**565,003**	**11,210**	**153,253**
	(38.3%)	**(5.4%)**		**(7.2%)**	**(6.0%)**	**(3.4%)**	**(7.0%)**
합계	1,238	1,431,385	94.5	106,829	9,474,411	332,486	2,203,354
	(100%)	(100%)		(100%)	(100%)	(100%)	(100%)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기획재정부(2021.7.20.)

❑ 개요

○ [정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1.7.20.] 정부는 2021년 7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주요 목적)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

※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주요 내용

○ [신규 자유무역협정]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

※ 긴급관세: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

※※ 상계관세: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

◈ 양국별로 각각 11,000여 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

◈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

○ [협정관세 신청 절차]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정책동향

◈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 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으며,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을 할당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처가 지정한 관계기관(예, 농축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함.

◈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

❍ [향후 일정 등] 국무회의(2021.7.20.)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

※ 발효일: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료 : 행정안전부(2021.7.22.)

❍ [행정안전부, 2021년 7.5~8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1.7.22.] 정부는 2021년 7월 22일, 지난 2021년 7월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주요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이 추가로 제공(총 30종)

◈ 농업 · 농촌 동향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1.)

❑ 개요

○ [농식품부,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2021.7.21.]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

- (주요 내용)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어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위험증가, 가축폐사 및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우려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

❑ 주요 내용

○ [고령농업인 등 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강화] △폭염특보 시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요령※ 알림서비스 제공, △농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현장 지원 서비스 강화※※, △농촌지역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및 드론 활용 현장 예찰※※※ 활동 운영

※ Heat Time(12~17시) 작업 중지, 농작업 시 충분한 휴식, 물 자주 마시기, 무더위 쉼터 이용 등

※※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농업인행복콜센터),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영농활동 지원) 및 행복나눔이(가사활동 지원) 파견(2021년 26천 가구)

※※※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실시

○ [가축폐사 및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사전예방 강화] △가축사육 농가 대상,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 유도, 냉방시설 등 긴급점검 및 시설보완 지원, △농작물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지원, 고랭지 배추, 무 수매비축 및 예비묘 준비

○ [재해대책상황실 지속운영(~2021.10.15.), 폭염 상황 파악 및 피해복구 지원] △폭염 피해 시 재해보험의 신속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우선지급 등 현장복구 지원, △피해 정도에 따라 어린가축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 피해복구비 신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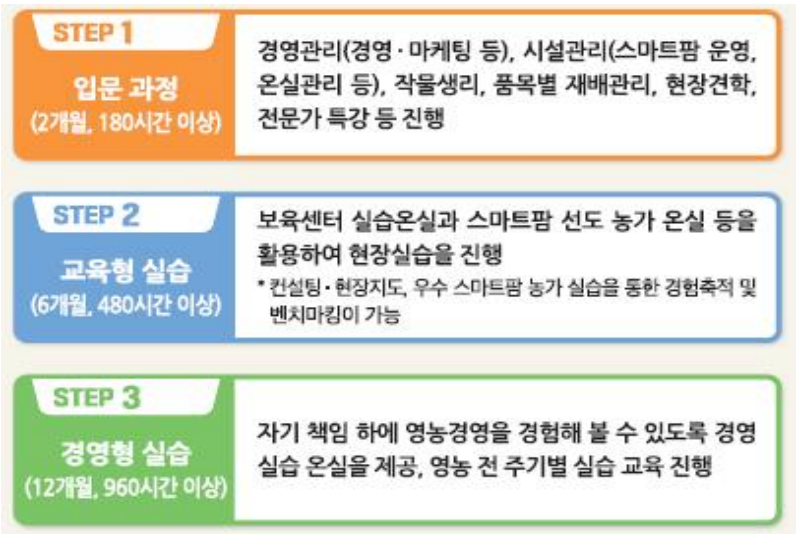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교육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3.)

○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최종 선발, 2021.7.23.]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8명※ 최종 선발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별(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52명

- (주요 내용)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이론부터 현장실습, 경영실습까지 스마트팜 취·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 △지역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2021년 8월부터 20개월간 교육



- (기대효과)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

농식품부 장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1.)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 참석, 2021.7.21.]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간 열리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이하 '사전회의')에 김현수 장관이 영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

※ 사전회의: 2021년 9월 개최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국제사회에서 논의·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조정·구체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개최

※※ 김현수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공동 대표단 구성

※※※ 사전회의 및 정상회의 대응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홍상 원장 주재하에 생산자·소비자·학계·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표

- **(주요 내용)**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지역 단위 생산소비** 등 **국제사회 협력 과제**를 **제안**

▌주요 일정(안)▐

<table>
<tr><th>일자</th><th>한국 시각</th><th colspan="4">일정(주요 논의 주제)</th></tr>
<tr><td rowspan="6">7.26.
(월)</td><td>16:00~18:00</td><td colspan="4">• 개회식</td></tr>
<tr><td rowspan="2">18:30~21:20</td><td colspan="3">• 분야별 세션</td><td rowspan="2">• 각료급 연설</td></tr>
<tr><td>– 과학·혁신</td><td>– 기아 종식 및 영양</td><td>– 식량, 기후, 생물다양성</td></tr>
<tr><td>22:00~24:00</td><td colspan="4">• 기념식</td></tr>
<tr><td rowspan="2">24:30~02:20</td><td colspan="3">• 분야별 세션</td><td rowspan="2">• 각료급 연설
(계속)</td></tr>
<tr><td>– 토크쇼</td><td>– 청년
– 푸드시스템과 영양(CFS지침)</td><td>– 생산자
– 연구</td></tr>
<tr><td rowspan="7">7.27.
(화)</td><td rowspan="3">16:00~17:50</td><td rowspan="3">• 각료급 라운드 테이블</td><td colspan="2">• 분야별 세션</td><td rowspan="6">• 각료급 연설
(계속)</td></tr>
<tr><td>– 금융</td><td>– 양성평등·여성</td></tr>
<tr><td>– 혁신</td><td>– 인권</td></tr>
<tr><td>18:30~20:30</td><td>– 건강한 음식</td><td>– 공평한 생계</td><td>– 회복력</td></tr>
<tr><td rowspan="2">22:00~24:00</td><td rowspan="2">• 각료급 라운드 테이블</td><td>– 민간부문</td><td>– 시민사회</td></tr>
<tr><td>– SMEs</td><td>– 향토 푸드시스템</td></tr>
<tr><td rowspan="2">24:30~02:20</td><td rowspan="2">– 후속 조치</td><td>– G20 연계</td><td>– 자금 동원</td></tr>
<tr><td>– 푸드시스템 생계·임금</td><td>– 지역</td></tr>
<tr><td rowspan="3">7.28.
(수)</td><td rowspan="2">16:00~18:00</td><td colspan="2">• 분야별 세션</td><td rowspan="2">•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td><td rowspan="2">• 각료급 연설
(계속)</td></tr>
<tr><td>– 도시·지역 푸드시스템</td><td>학교급식
블루 푸드</td></tr>
<tr><td>18:30~20:30</td><td colspan="4">• 종합 회의</td></tr>
<tr><td>22:00~24:00</td><td colspan="4">• 폐회식</td></tr>
</table>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19.)

❍ **[농식품부,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1.7.19.]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

정책동향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

- (주요 내용)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2021년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2021.10.1.~10.31.)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 축산 동향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사항 개정 고시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7.23.)

○ [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사항 개정 고시 추진, 2021.7.23.] 농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7월 내 개정할 계획

- (추진 목적) 그간 사료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단백질사료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가축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

- (주요 내용) △양돈사료는 기존에 설정된 조단백질 상한치를 최대 3%까지 하향 조정하고, 가금·소 사료는 유통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상한치 설정, △육성돈 전후기와 비육돈 전후기 구간은 통합하여 단순화시키고, 포유자돈은 이유돈전기와 통합하여 구간을 간소화

- (기대 효과) ① 양돈사료 내 단백질 1% 감축 시 분 배설량은 1.8%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NH3)는 최대 10% 저감, ② 단백질 1% 감축시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낮춰 연간 온실가스 355천 톤CO_2eq 감축 가능, ③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감축함으로써 3~4원/kg 사료비 절감(6월 기준) 가능

정책동향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서울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1.7.19.) – 서울시는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하며,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등록 가능
부산	• 부산시,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 발표(2021.7.22.) – 부산시가 시 차원의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를 지목 –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축소사회 선제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 등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사회, 초고령 사회, 균형·포용 6대 분야의 추진전략 아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제시 – 6대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는 ▲일자리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의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및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의 '스마트&콤팩트 도시관리 정책', ▲초고령 사회 분야의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의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의 균형과 포용' 등 – 시는 109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5년간 3조 5,736억 원을 투입, 국비 1조 8,358억 원과 시비 1조 7,378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 • 부산시, 2021 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개최(2021.7.20.) – 영남권 5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들이 영남권의 상생 번영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오후 2시 「2021 영남미래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 – 2021 영남미래포럼은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개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 영남권의 지역 현안과 상생 발전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 –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산학 협력 방안, ▲영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도약시킬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를 위한 광역대응체계 구축 방안, ▲부울경 메가시티 성과와 향후 전략, ▲그리고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영남권 공동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등을 제시 –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채택하고, 협약서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광주	• 광주시, '아름다운 마을' 지원사업 대상 10곳 선정(2021.7.22.) – 광주광역시는 동구 학운동 '무꽃동 주민협의회' 등 '아름다운 마을 지원사업※' 대상 마을 10곳을 선정, 대상 마을은 지난 2년간(2019~2020년) 주민참여 활동 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선정된 마을에는 선정 순위별로 1,0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총 9,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아름다운 마을 지원사업' 은 광주시가 2021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주정차 등 마을 환경정화와 마을에 조성한 시설물(벽화, 화단 등)의 사후관리 등 현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결해 가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 1순위로 선정된 동구 학운동 '무꽃동 주민협의회' 는 광주시 비대면(온라인) 주민참여 시스템(앱) '마을e척척※)' 을 적극 활용해 의제 선정과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매월 일제 대청소, 내집 앞 내가 쓸기 캠페인, 주민참여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을 가꾸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제작 · 배부하고 독거 세대를 위해 밑반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 ※ 마을e척척: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마을현안을 찾고, 마을의제를 선정 · 해결하는 응용프로그램(앱)
대구	• 대구시, 청년농업인과 공감 · 소통하는 현장간담회 개최(2021.7.19.) – 대구시는 2021년 7월 19일, 20명의 청년농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관련 정책 강화 및 지속가능한 대구 농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 – 권영진 대구시장은 "농업 · 농촌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간담회가 기존 청년농업인들과 신규 청년농업인 그리고 관계기관이 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꿈을 품고 안정적인 농업 일자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언급
대전	• 대전시,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접수(2021.7.19.) –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30일까지 기술보급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 이번 시범사업은 작물생육환경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대에 중점 – (모집분야) ▲식량작물분야 3개 사업, ▲축산분야 7개 사업, ▲채소분야 4개 사업, ▲포도분야 6개 사업, ▲배 · 기타 과수분야 3개 사업, ▲버섯특작분야 3개 사업, ▲농촌자원분야 1개 사업 등 총 7개 분야 28개 사업 – (신청자격) 주소,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 또는 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
강원	• 강원도,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2021.7.21.) – 강원도는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미래산업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해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를 최종 6건 선정 – 최우수상은 화천군에서 발굴한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한 "농촌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H-IUM) 운영" 이 선정, 이외에 우수상은 도 총괄기획과, 장려상에는 도 경제진흥과, 동해시 가족교육과 및 도시재생과, 횡성군 기획감사실이 선정 〈 우수사례 주요 내용 〉 ◈ (최우수상) 전국 최초! 농촌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H-IUM) 운영 – 수요응답형 어플(화천이음)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버스를 부르고 이동 – 탑승도우미 배치 및 교통안전 매뉴얼 마련으로 생활 SOC의 스마트화 및 방과 후 돌봄 문제 해결 ◈ (우수상) 되게 하려면 '방법' 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 가 보인다! –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1.35배 규모 해제 · 완화 – 완화 지역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고층 건물 신축 가능 등 주민재산권 보장 및 도심 발전 기대 – 아울러, 우수사례는 2021년 9월에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 출품하고 모범사례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기	• 경기도, 청년농업인 대상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농업세법' 교육(2021.7.19.) –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 –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경기도 내 청년4-H회원들이 세무·법률 관련 내용을 사례로 배워보고 농업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강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 (교육 기간) 수원시 등 16개 시군 청년농업인 4-H회원 43명이 참여해 2021년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20시간 이수, (교육내용) ▲청년4-H회원들의 영농현장 고민을 해결해주기, ▲농업경영체 각종 신고요령 및 분쟁사례, ▲농업법인 실무업무 이해, ▲농업법률 기초와 분쟁해결 방법 등 과정으로 구성
충북	• 충북도, '강소농 육성 최고 과정 교육' 실시(2021.7.19.)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지역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 일환인 '강소농 최고과정' 교육을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며, 총 6회, 35시간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하여 진행 – 이번 교육은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정보 공유, 지역발전 농업 리더로서의 자질향상과 농산물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으로 최고의 강소농 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농촌지도기관 핵심 교육 사업 – (세부 내용) ▲강소농 최고과정의 이해와 비스니스 모델링, ▲강소농 사업활성화와 경영관리, ▲고객 감동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개발 운영, ▲품격있는 최고 강소농 리더십 등 성공적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
충남	• 충남도, '로컬마트 공급체계' 확대(2021.7.21.) – 충청남도는 2021년 7월 21일, 하나로마트 및 산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마트 공급체계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그동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하나로마트 바이어 초청 상품을 제안&홍보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도는 앞서 2020년 9월 지역 농산물을 타지 유통 거점을 거치지 않고 인근 마트로 곧장 공급하는 '충남농산물 로컬마트 공급체계'를 구축, 이 공급체계는 당초 '농가 →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을 '농가 → 농협 → 도내 마트 → 소비자'로 줄인 것이 핵심,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도내 마트 타지 농산물 판매 문제를 완화 – 도는 지역 농산물 물류비 절감과 신선도 확보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로컬마트 공급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 향후 현재 38개 매장을 수요 조사를 통해 46개 매장까지 확대하고,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와도 밀접 협의를 통해 유통 대상을 늘릴 방침
전북	• 전북도, 사회적 농업 정책 설명회 개최(2021.7.19.) – 전라북도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영)여민동락 주관으로 2021년 7월 19일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사회적 농업※ 경영체 대표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정책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 ※ 사회적 농업: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범죄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 – 도는 이미 2018년도부터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 2021년에는 7개 시군에 10개소를 선정되어 전국(60개소) 최다 운영 – 이번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정책 설명회 및 토론회는 농촌지역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간 오랜 경험을 쌓아온 사회적 농장의 새로운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전남	•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전국 선도(2021.7.18.) –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2021년 7월 현재 336개소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 현재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2,020개로, 전남이 가장 많고 전북, 경북, 경기가 뒤를 이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근 2년간 평균 4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로 선정되면 1대1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남도장터·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신제품 개발 등 융복합강화사업을 비롯해 융자금을 지원받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운영 활성화와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지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이 중단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에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을 추진, 제품을 납품한 인증경영체들은 2021년 상반기에만 총 1억 300만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지난 5월 도가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에 전국 최초로 비식품인 농어촌체험관광 상품을 입점시켜 1천만 원의 매출 창출 – 도는 2021년 말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400개소까지 발굴 확대할 계획으로, 농가 소득 창출과 활력 증진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
경북	• 경북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활동에 총력(2021.7.19.) – '폭염대비 가축관리대책'에는 폭염경보 발효 시 가축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축사 주변 그늘막 설치, 밀식사육 자제, 송·환풍기 및 쿨링패드 등을 이용한 적정 환기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신선한 물과 비타민 등을 급여해 면역력을 높이는 가축관리 요령 등이 포함 – 또한, '가축 폭염관리 T/F'를 3개반 10명으로 구성, '폭염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도 T/F를 운영토록 하여 폭염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대응 – 가축재해보험료 50억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43억 원 등 총 8개 사업 125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 피해 최소화와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SMS 등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폭염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
경남	•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자금 확보 어려운 농가 지원(2021.7.19.) –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 2021년 하반기에는 농자재·어구, 종자(묘), 농약, 비료, 사료 등 재료구입과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만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173억 원의 융자를 실시 –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개인은 3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 –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2021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후 9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 가능, 다만 개인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금액이 축소될 수 있어 주의
제주	• 제주도, 농업미생물, 토양환경 개선·축산악취 저감 '효과 탁월'(2021.7.21.)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유용미생물 4종·115톤을 8,193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으며,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농업미생물이 토양환경 개선과 축산악취 저감에 효과 탁월 – 유용미생물은 토양 물리성 개선 및 작물 토양이용률 향상, 생육 촉진, 축사 악취 저감, 가축 소화율 향상 효과가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에는 축산단지가 밀집해 있어 축산악취 저감과 함께 최근 이슈화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 해결에도 큰 도움 –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총 200톤을 배양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미생물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아젠다발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외

이슈 브리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7.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추경안)을 2021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3개 부처 7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단위: 개)▐

구분	회계기금명	주요 내용	소관 부처	증감 사업 수(총지출)
추경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1
		교육위원회	교육부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해양수산부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4
			중소벤처기업부	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9
			질병관리청	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3

○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편성 배경에 대하여 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국민을 지원하고, ②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해 백신 확보·접종,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③ 일자리,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여 민생경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아젠다 발굴

〈주요 내용〉

○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35.0조 원 규모로 제출, 총 4개 분야로 구성

- 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3.4조 원, ② 백신 개발·구매·접종과 손실보상 등 방역 보강에 4.4조 원, ③ 고용 조기 회복과 청년·문화 업계·취약계층 등 지원에 2.6조 원, ④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조 원※, 지방재정 보강에 12.2조 원이 각각 편성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

▌2021년 제2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단위: 조 원)▐

구분	주요 내용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3.4)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8.1)	8.4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쉬백)	1.1
백신·방역 보강(4.4)	백신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	4.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6)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1.8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
지역경제 활성화(12.6)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지방재정 보강(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
총규모		**33.0**

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021.7., 기획재정부

○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추가 세수 31.5조 원, 2020년 세계잉여금 1.7조 원, 기금재원 활용 등 1.8조 원이며, 이 중 2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국가채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원이 감소한 963.9조 원으로 GDP 대비 47.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농식품부…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균형 있는 품목 배정 필요

○ 농식품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2조 2,851억 2,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196억 원이 증액, 또한 총지출은 16조 5,613억 5,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0억 원 증액

아젠다 발굴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은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

- **2021년 본예산**은 **770억 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00억 원**이 **증액**된 **1,670억 원**이 편성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절차**는 **유통채널**에 따라 크게 **대형마트, 온라인 및 전통시장**의 경우로 구분

◈ (대형마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소비쿠폰 사업 대상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면 농식품부는 선정 업체별로 쿠폰 예산을 배정하고 aT에 소비쿠폰 예산을 교부, 이후 행사기간 동안 대상업체는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농축산물 품목을 판매하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업체는 aT에 소비자 식별 정보, 판매일자 및 품목 등이 담긴 정보를 제출하고 할인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형태※

※ (절차) 소비자는 20% 할인품목 선택 → 업체는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금액으로 先 판매 → aT에서 유통업체에게 사후 정산

◈ (온라인) aT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온라인 유통업체에게 쿠폰 예산을 배정 및 교부하면, 소비자는 온라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20%의 할인쿠폰을 다운로드하여 행사 농축산물 품목 구매 시 다운로드한 할인쿠폰을 적용받게 되며, 이후 aT에서는 유통업체에게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주는 방식※

※ (절차) 소비자는 20% 할인쿠폰 받기를 다운로드 → 소비자가 행사 품목 구매 시 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 → aT에서 유통업체에게 사후 정산

◈ (전통시장) 농식품부에서 aT에 예산을 교부하면 aT는 이를 다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재교부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앱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며, 소비자는 제로페이앱을 통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절차※

※ (절차) 소비자는 제로페이로 상품권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1만 원권/3만 원권/5만 원권 → 각각 7천 원/2만 1천 원/3만 5천 원에 구매) →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판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첫째, 동 사업의 **2021년도 집행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불용 및 이월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둘째, 동 사업은 **2021년도 5월까지 소비쿠폰액 소진액 560억 원**의 **37.6%**인 **210억 원 3,000만 원**을 **계란 단일품목**에 **사용**하였으므로, 농식품부는 금번 추경으로 확보되는 사업비 집행 시 **농축산물 소비진작**을 통한 관련 산업 활력 제고라는 동 사업의 효과가 **농축산물 전체 품목**에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아젠다 발굴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집행 현황(단위: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6월			
	배정	배정비율 (%)	집행	집행률 (%)	배정	배정비율 (%)	집행	집행률 (%)
대형마트	23,500	58.8	23,500	100.0	43,700	57.5	45,939	105.1
온라인	9,456	23.6	9,456	100.0	13,680	18.0	9,220	67.4
중소마트/전통시장	7,044	17.6	7,044	100.0	18,620	24.5	9,159	49.2
합계	**40,000**	**100.0**	**40,000**	**100.0**	**76,000**	**100.0**	**64,318**	**84.6**

주: 2020년 및 2021년 운영비 10억 원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쿠폰 계란품목 사용 현황(단위: 백만 원)▐

구분	품목	사용액	월평균
대형마트	계란	21,030	5,258
	계란 외	18,564	4,641
	소계	39,594	9,899
온라인		8,667	2,167
중소마트/전통시장		7,738	1,935
합계		**55,999**	**14,000**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식품 공급 사슬의 수자원 사용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Tracking the U.S. Domestic Food Supply Chain's Freshwater Use Over Time" (2021.7.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미국 식품 공급 사슬의 수자원 사용

○ 미국은 세계적으로 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며, 특히 농업에서도 수자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담수를 취수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 미국 내 소모성(consumptive) 물 소비량의 80%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을 겪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U.S. Drought Monitor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농업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으며, 특히 12월에는 6.7%의 미국 영토가 심각한 가뭄(D4)을 경험함.
  ※ U.S. Drought Monitor는 가뭄 등급을 D0(abnormal drought)부터 D4(extreme drought)의 5단계로 구분

-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67.1%가 가뭄을 경험하였고, 가뭄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사이클론, 산불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수자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농식품은 신선 채소이며, 식품 공급 사슬에서는 생산 단계에 수자원이 대부분 투입됨.

- 2012년 기준 신선 채소를 생산하는데 연간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5.1조 갤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견과류, HMR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4.5조 갤런), 돼지고기, 소고기 및 기타 육류(2.5조 갤런) 등에 많은 수자원이 투입됨.

- 하지만, 수자원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식료품의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수자원 필요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아젠다 발굴

- 식품 공급 단계 중에서는 작물 생산에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되는 것(72%)으로 나타남. 뒤이어 가축 생산에 수자원이 많이 투입되며, 에너지, 가공 및 포장,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수자원은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의 양에 비해 미미함.

- 육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이 비중이 높으며, 특히 가금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이 직접 소비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사용된 수자원의 양이 5배임.

▌가정 소비 식품의 공급 사슬에서 담수가 사용되는 비율▐



○ 수자원 사용의 증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탄소 배출량, 토지 사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농산물 가치 사슬의 환경 영향을 살펴보면, 농식품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 토지 이용, 수자원 사용이 나타나며, 가공 및 포장 단계에서는 산림 생산물이 사용되고, 소비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1)

※ 일본 내각부 “まち · ひと · 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について”(2021.6.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1)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8일,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이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 제2기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12.21.)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 패키지 및 개별 정책에 대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원격근무를 기회로 인구 이동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등 국민의 의식 및 행동이 변화함.

○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본 기본방침에서는 ❶ 지역이 자체적으로 특색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주적 · 주체적으로 대응, ❷ 도시에서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및 일자리 유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방문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지역을 실현해 나감.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종합전략에서 제시한 정책체계※를 기반으로 대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롭게 3가지 관점(사람, 디지털, 그린(친환경))을 중점적으로 지방 창생 대응을 개선하고,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책지표를 확실히 세워 모든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 (기본 목표) ①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새로운 사람 유입을 만들어 내며, ③ 결혼·출산·육아 실현, ④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 (횡단적 목표) ① 다양한 인재 활약 추진, ② 새로운 새대 흐름 활용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 행동이 변화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도시에서 각 지역으로 인구 및 일자리 흐름 창출을 추진함.

-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 급증, △특히 젊은 층의 지방에 대한 관심 증가, △도쿄에서 지방으로 개인 · 기업 전출 등 변화 발생

아젠다 발굴

○ 이에 따른 각 지역의 특색을 기반으로 자주적·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 △감염병 및 인구감소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 고조,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재생 에너지 및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지역 창생 SDGs에 대한 관심 고조

-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❶ 사람(지방으로 사람 유입 창출, 인재 지원), ❷ 디지털화(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❸ 그린(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관점에서 지방 창생을 추진

■ 자료 출처:
https://www.chisou.go.jp/sousei/info/#an20

언론 동향 한국판 뉴딜 속 농업·농촌 탄소감축 관련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 속 농업·농촌 탄소감축 관련 주요 동향

〈한국판 뉴딜 속 농업·농촌의 탄소감축 역할 부상〉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운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선도국가 도약과 대전환의 선언'이라고 밝혀

- 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이후 2050 탄소중립 선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유엔 전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설정 등 탄소중립 체계·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 범정부적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앞다퉈 추진 중인 가운데 농업계는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당초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

○ 이에 따라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이 농업계의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

아젠다 발굴

○ 기후변화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병해충 발생 증가, 재배지 변화 등 농업 생산기반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계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 농업은 토양, 과수, 산림 등이 대표적인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흡수원으로서 잠재력이 큰 산업

- 특히, 토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이 크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한 식물체를 퇴비화해 비료로 사용, 토양 속에 가둬놓는 '탄소농사'는 토양 속 이산화탄소 저장을 확대

- 이에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토양 탄소저장량은 대기의 2~3배로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해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토양의 탄소 저장력을 강화하는 산업인 것을 의미

○ 이길재 실용화재단 디지털농업본부 농업환경에너지팀장은 "탄소중립의 압박으로 인해 농업분야도 그동안 경제성이 없거나 불편해서 하지 않았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축산분뇨, 농업부산물)나 논물관리 면적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고, 사료의 단백질함량 기준이 도입되거나 에너지다소비시설의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

-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우리농업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해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면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탄소감축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는 지금?〉

○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

- 대표적인 적응대책으로는 △신품종·신재배기술을 통한 생산성 유지, △병해충·재배 예방 등 생산활동 지속을 위한 대책이 있으며, 완화대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감시설 도입,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

아젠다 발굴

○ 농식품부는 현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실천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축산업, 농촌, 식품유통, 산림** 등 **4대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가 담겨질 예정

○ 이와 관련, **2020년 12월** 마련돼 **유엔**에 **제출**한 **'2050 국가 장기저탄소전략'** 내 **농업 부문**의 **저탄소 전략**을 살펴보면, **농축산부문 저탄소 전략**은 크게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수요자 참여정책 활성화** 등 **4가지**

- 이를 위해 각각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스마트 축사 확대**, **간단관개·논물얕게대기·양질조사료·저메탄 사료 보급**, **가축분뇨 에너지화·태양광 보급·지역 히트펌트 확대**, **농업인 인센티브 확대·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

○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에너지공급(전력·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등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 비전·전략**을 **제시**

○ **농축산분야**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스마트농업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21년 상반기**에 **작성**하고 **2021년 말까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

○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소득원**, **새로운 기회**로도 다가오고 있으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은 **탄소저감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수익**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

◈ **(저탄소농산물인증제도)**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아젠다 발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농축산 감축목표 7.9%, 2050 탄소중립은?>

❍ 정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소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인 8억 5,100만 톤CO_2eq 대비 37%를 감축한 **5억 3,600만 톤CO_2eq**, 이 중에서 **농축산(비에너지)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인 2,070만 톤CO2eq 대비 7.9%를 감축한 **1,900만 톤CO_2eq**으로 설정

❍ 이러한 목표치에 대한 **2030 농축산 주요 감축 수단**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사업 감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논 물관리 감축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30만 톤CO_2eq**를 **감축**,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40만 톤CO_2eq**, **양질 조사료 가축급여**와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를 통한 **20만 톤CO_2eq**으로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수도작**과 **축산분야**에 **집중**

❍ 2009년 대비 **2018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간 **증가추세**로 2,100만 톤 CO2eq에서 **2,180만 톤CO_2eq**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벼 재배분야 메탄**(CH4) **배출량 감소**는 **논면적 감소**가 **원인**이며 **농경지토양 분야 아산화질소**(N2O) **배출 증가**는 **가축분뇨 증가**가 **원인**

❍ 따라서 **벼 재배 분야 감축수단**으로는 **논의 타작물 전환**과 **논물관리** 등이며, **농경지 분야**는 **질소질비료 절감**과 **토양탄소 격리** 등에 주목

❍ **축산부문 배출량**은 **장내발효 446만 5,000톤CO_2eq**(47.5%), **가축분뇨처리**가 **493만 3,000톤CO_2eq**(52.4%)를 차지, 따라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처리공정별 배출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즉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 확대를 통해 **퇴비화율**을 **줄여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

❍ **농업부문 감축**을 위해 정부는 **탄소저감 기술**의 **실행력 확보**와 **추가수단 발굴, 사업화** 등을 추진

- 우선 **벼 재배 물·양분관리** 등 감축 수단의 **저탄소 선택형 직불금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탄소 격리기술 개발**과 **검증**, 현장사업화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며, 농경지 토양탄소 축적량 산정, 국가 고유개수 개발과 농경지 과수 생장에 따른 **입목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원 검증**과 **적용**도 추진

- **축산부문**은 **저메탄 사료** 등 **메탄저감·장내환경 개선 효과**를 **충족**하는 **저감제**를 **개발**하는 한편, 축종별 사육 전 기간에 걸친 탄소발생량 추적, 총 탄소를 줄이는 정밀 사양기술 개발·현장보급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을 **도입**, 또한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화 기술 확대**도 적극 추진

아젠다 발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저탄소** 등의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

○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의 주요 과제 속에서 **축산업계** 또한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담 저감 사료 개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7억 2,760만 톤**으로 이 가운데 **농업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120만 톤**이며, 1990년에 비해선 **149% 증가**했고, **축산부문**도 전체 가축마릿수가 늘면서 같은 기간 **51.5%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메탄**과 **분뇨**가 **퇴비**가 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 아산화질소**가 **대표적**, 이에 따라 **사료효율**을 **높이고 퇴비화 공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

○ 전문가들은 **사료단계**에서 메탄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부담저감 사료**, 즉 저메탄 사료 개발이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실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는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와 함께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 저감** 등의 **방안**을 **제시**한 상태

- **농식품부**는 **저메탄 사료**와 **미생물제제 사용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도**를 **50%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확대**할 계획

- **사료업계**에서는 **양돈, 양계** 등의 축종을 중심으로 **배합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제한**을 통해 **저단백질 사료공급체계**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한편, 현장에서는 **한우 비육기간**을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환경친화적 사양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축산과학원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아젠다 발굴

○ 환경부담저감 첨가제에 대한 개발과 활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과학원은 메탄 저감 효과를 가진 후보물질과 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고유 배출계수를 정립

- 이유경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연구사는 "이미 유럽에서는 모든 생산물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제품에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 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숙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 언급

○ 현재 가축분뇨 처리 방법에는 퇴·액비화, 에너지화 등 자원화 처리 방법과 정화 처리가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방안은 가축분뇨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

- 이 중에서 바이오가스화 처리 방법의 경우 유기성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생산하며 메탄을 주성분으로 연료, 열,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는 이같이 여러 활용성에 더해 축분의 메탄을 포집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암모니아를 저감하기 때문에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친환경 축산 조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2021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개편안에서 가축분뇨는 기존 1.0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행 유지되면서 아쉬움을 남겨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현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순환농업협회는 2021년 7월 14일, 덴마크 바이오가스 얼라이언스※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분야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 덴마크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설계, 시공, 신용 보증 업무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인 바이오가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

-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같이 집약 축산 형태여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심해 왔지만 축분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로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시설로 최근 자원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혀

아젠다 발굴

〈농기계 · 자재업계 등 탄소저감 움직임 활발〉

❍ 한편, **탄소저감**을 위한 **농기계 · 자재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계**의 경우 이미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기트랙터, 수소트랙터** 등의 **개발**에 **시동**, 또한 **작물보호업계, 비료업계** 역시 탄소제로를 위한 **탄소저감 제품 개발**과 **저투입 농법** 등에 전력하는 모습 보여

❍ 한 전문가에 따르면, **환경보호**와 **국내 농기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전기 트랙터**와 **수소연료 트랙터**의 **연구개발**과 **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강조

❍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기후와 관련한 아젠다가 국제적인 이슈가 됐던 만큼 **신젠타, 바이엘, 바스프** 등 **글로벌 농산업기업들**부터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발자국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탄소발생**을 **줄일 수 있는 농법**과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

❍ **국내 기업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기오염 정화활동,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과 **사용횟수**를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

❍ 최근 농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랩스**는 최근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미래농업 탄소감축 협의체'** 를 **발족**, **농촌**의 **감소감축 · 상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국내 농가**에 **적용 · 확산**할 수 있도록 연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혀

자료: "[40주년 특별기획] 한국판 뉴딜,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돼라 ①탄소감축농업 기반 구축 서둘러야" / "[40주년 특별기획] 한국판 뉴딜,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돼라 ②탄소감축 농업 · 농촌 어떻게 추진되나" / "[40주년 특별기획] 한국판 뉴딜,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돼라 ③ 탄소저감 농기계 · 자재 개발과 보급 속도 낸다" / "[40주년 특별기획] 한국판 뉴딜,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돼라 ④, ⑤ 축산부문" (농수축산신문, 2021.7.22.)

통계·조사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1.7.19.)

❑ 개요

○ [통계청,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21.7.19.]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및 시기) 보리 553개, 마늘 536개, 양파 358개 / 보리: 수확 직후(6월 중순 ~7월 상순), 마늘·양파: 수확기(5월 중순~6월 하순)

❑ 조사 결과

○ [2021년 보리 생산량] 12만 8,869톤※, 전년 대비 1만 4,800톤(-10.3%) 감소

※ (2016) 107,812톤 → (2017) 109,727 → (2018) 151,401 → (2019) 200,003 → (2020) 143,669

- (원인)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은 8.9% 증가했으나, 재배면적 17.6%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3% 감소

- (시도별) 전남(5만 3,018톤, 전체 생산량의 41.1% 차지) > 전북 5만 1,318톤(39.8%), 경남 1만 1,920톤(9.2%) 순

○ [2021년 보리 재배면적] 2만 8,823ha, 전년(3만 4,978ha) 대비 17.6% 감소

- (원인) 소비량 감소, 농협 계약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 감소

○ [2021년 보리 10a당 생산량] 447kg, 전년(411kg) 대비 8.9% 증가

- (원인) 보리 생육에 맞는 적당한 강수량과 냉해, 수해, 습해 등 피해발생이 줄어 10a당 생산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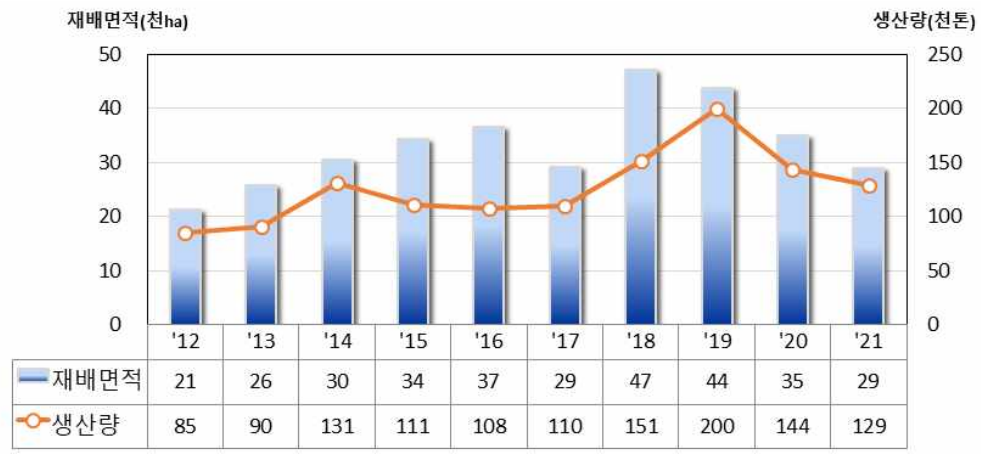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보리	34,978	28,823	-17.6	411	447	8.9	143,669	128,869	-10.3
겉보리	7,310	5,783	-20.9	437	495	13.2	31,960	28,620	-10.5
쌀보리	19,498	15,865	-18.6	420	450	7.0	81,897	71,336	-12.9
맥주보리	8,170	7,175	-12.2	365	403	10.4	29,812	28,913	-3.0

※ 생산량은 조곡 기준

통계·조사

▌연도별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재배면적	21	26	30	34	37	29	47	44	35	29
생산량	85	90	131	111	108	110	151	200	144	129

❍ [2021년 마늘 생산량] 30만 8,532톤※, 전년 대비 5만 4,900톤(-15.1%) 감소

※ (2016) 275,549톤 → (2017) 303,578 → (2018) 331,741 → (2019) 387,671 → (2020) 363,432

- (원인) 1월 저온현상으로 10a당 생산량이 2.1% 감소, 재배면적 13.3%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1% 감소

- (시도별) 경남 8만 609톤(전체 생산량의 26.1% 차지) > 경북 6만 5,898톤(21.4%) > 충남 5만 9,401톤(19.3%) 순

❍ [2021년 마늘 재배면적] 2만 1,999ha, 전년(2만 5,372ha) 대비 13.3% 감소

- (원인) 전년 마늘가격 하락 영향으로 감소

※ 마늘 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6,011원 → (2017) 6,087 → (2018) 5,551 → (2019) 4,255 → (2020) 3,767(-11.5%)

❍ [2021년 마늘 10a당 생산량] 1,402kg, 전년(1,432kg) 대비 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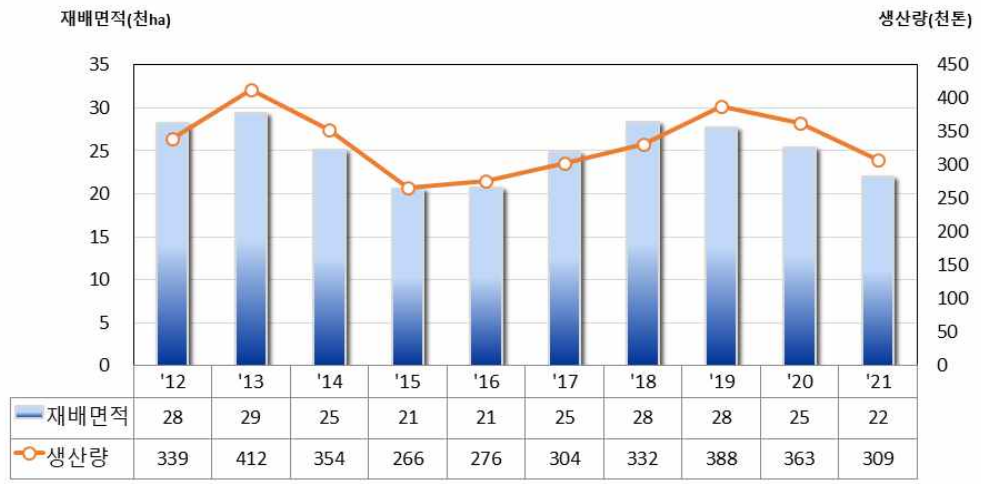
- (원인) 전년 대비 월동기 기온 저하로 결주 발생 및 초기 생육 부진으로 피해 발생 증가, 알이 굵어지는 시기(4~5월)에 잦은 비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등 작황이 부진하여 10a당 생산량 감소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마늘	25,372	21,999	-13.3	1,432	1,402	-2.1	363,432	308,532	-15.1
한지형	5,199	5,420	4.3	994	1,060	6.6	51,698	57,446	11.1
난지형	20,173	16,579	-17.8	1,545	1,514	-2.0	311,734	251,086	-19.5

통계·조사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재배면적	28	29	25	21	21	25	28	28	25	22
생산량	339	412	354	266	276	304	332	388	363	309

❍ [2021년 양파 생산량] 157만 6,756톤※, 전년 대비 40만 8,529톤(35.0%) 증가

※ (2016) 1,298,749톤 → (2017) 1,144,493 → (2018) 1,520,969 → (2019) 1,594,450→ (2020) 1,168,227

- (원인) 비대기 생육에 좋은 잦은 비와 피해발생이 줄어 10a당 생산량이 7.3% 늘었으며, 재배면적이 25.8% 증가하여 생산량은 35.0% 증가

- (시도별) 전남 57만 9,042톤(전체 생산량의 36.7% 차지) > 경남 33만 8,877톤(21.5%) > 경북 30만 7,653톤(19.5%) 순

❍ [2021년 양파 재배면적] 1만 8,461ha, 전년(1만 4,673ha) 대비 25.8% 증가

- (원인) 2020년 양파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 양파 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2016) 1,101원 → (2017) 1,234 → (2018) 819 → (2019) 604 → (2020) 1,071(77.3%)

❍ [2021년 양파 10a당 생산량] 8,541kg, 전년(7,962kg) 대비 7.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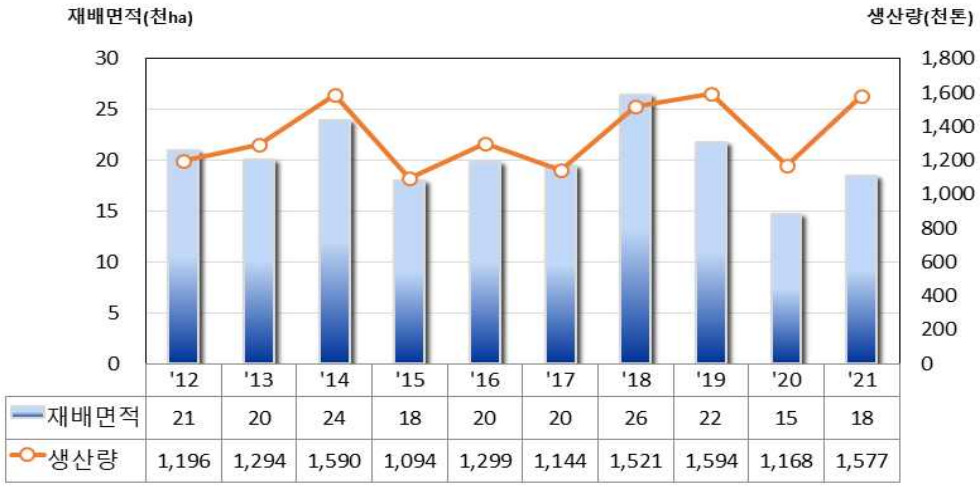
- (원인) 전년 대비 피해발생이 줄었으며, 3㎡당 포기수 및 개당 생중량 증가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재배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양파	14,673	18,461	25.8	7,962	8,541	7.3	1,168,227	1,576,756	35.0
조생종	1,985	2,151	8.4	7,894	8,387	6.3	156,688	180,403	15.1
중만생종	12,688	16,311	28.5	7,972	8,561	7.4	1,011,538	1,396,354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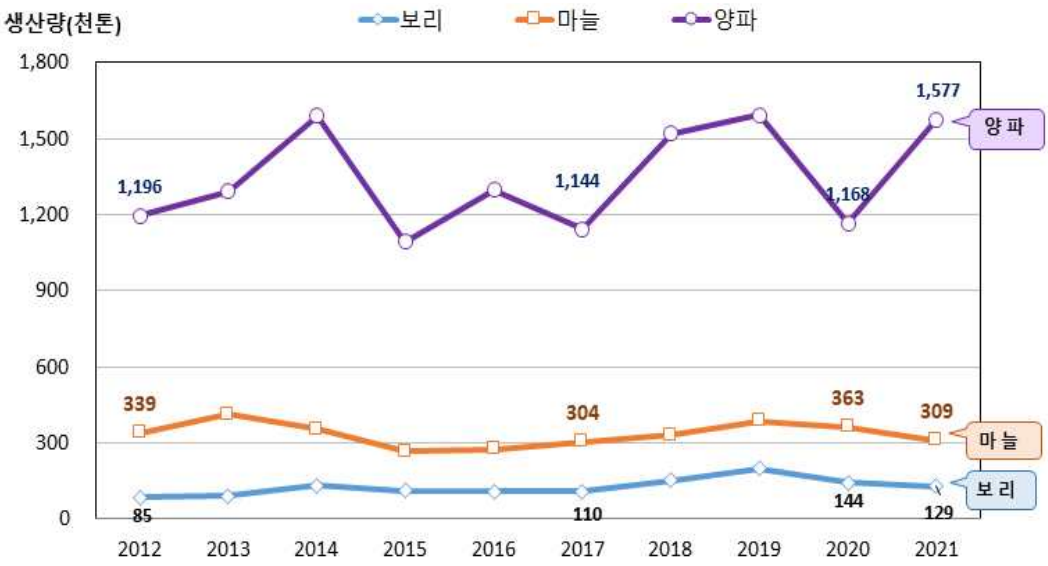
통계·조사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재배면적	21	20	24	18	20	20	26	22	15	18
생산량	1,196	1,294	1,590	1,094	1,299	1,144	1,521	1,594	1,168	1,577

▌연도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추이▐



개헌 관련 현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 국회(2020.7.17.)

❑ 개요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 「개헌 관련 현역의원 설문조사※」 실시, 2020.7.17.]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현역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설문 대상인 현역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설문에 응답

❑ 조사 결과

○ [개헌의 필요성] 178명의 응답 의원 中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 57.3%(102명) + 어느 정도 필요 36.0%(64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6.7% (별로 필요 없음 5.1%(9명) + 전혀 필요 없음 1.7%(3명)) 응답

-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6명의 의원들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 이 밖에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 (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응답

○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 (62.7%, 111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 (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 (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 (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 (18.7%, 33명), 및 기타(1.7%, 3명) 순으로 응답

※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허용, 백분율 합계: 189.8%

통계·조사

❍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 (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 이밖에는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 (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 (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 (4.5%, 8명), 및 기타(2.8%, 5명) 순

❍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 (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으며,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 (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 (2.9%, 5명), 및 기타(3.4%, 6명) 순

❍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 **"현행보다 낮춘다" (56.3%, 99명)**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24.4%, 43명),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 (0.6%, 1명) 순서로 응답

※ *보도 유의사항:*
본 설문조사는 표본을 설계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이며, 설문에 답변한 178명의 의견을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의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확한 응답자 수나 비율에 대한 표시 없이 "국회의원 93.3%가 개헌에 찬성한다" 등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현이란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